

News

실수요자 대출 비율 10%P↑…집값·소득요건도 완화 추진

매일경제

지난달 개인별 DSR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TV 비율과 DTI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을 이달 중 밝힐 예정. 또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신용대출 만기 기준 축소…앞으로 '영끌' 힘들어진다

조선비즈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신용대출 만기 기준 축소'가 가장 강력한 규제 효과를 낼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신용대출의 만기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의 상품이어도 매년 갱신되는 관행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

은행, 신용대출 3.7% 1년 만에 '최고치'… 빚투·영끌 어쩌나

머니S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1%에서 2.88%로 0.07%포인트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9년 6월 2.74%를 기록한 이래 1년 8개월만의 최대치.

금감원, 은행권 '코인 불법송금' 들여다본다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부문 검사에 착수. 올해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외화 송금 거래가 급증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처음. 코인 거래와 관련해 해외에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은행이 거래 과정에서 검증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계획.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등극…변수는 삼성생명법

뉴스1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만9180주(20.76%)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076만주(10.38%)를 이 부회장이 상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빚투 연일 최고치 경신…증권사 신용대출 '제동'

이투데이

4월 29일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23조5453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9689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0조5764억 원을 기록. '빚투' 규모가 커지자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한도 조절 실행.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신용융자 신규매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4개월째 무소식

전자신문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설립 예비인가가 4개월째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초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 업계에선 카카오페이의 연내 디지털 손보사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앞서 디지털 손보사로 출범한 캐롯손보의 경우 예비인가 후 본인가, 공식 출범까지 1년여 기간이 소요.

금감원, CEO 징징계 후폭풍…NH·KB·대신증권 과잉처분 논란

데일리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됐지만 과잉 징계가 불러온 후폭풍이 거세졌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를 내린 반면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증권사 전, 현직 CEO들에게 줄줄이 징계 처분 결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